



2023.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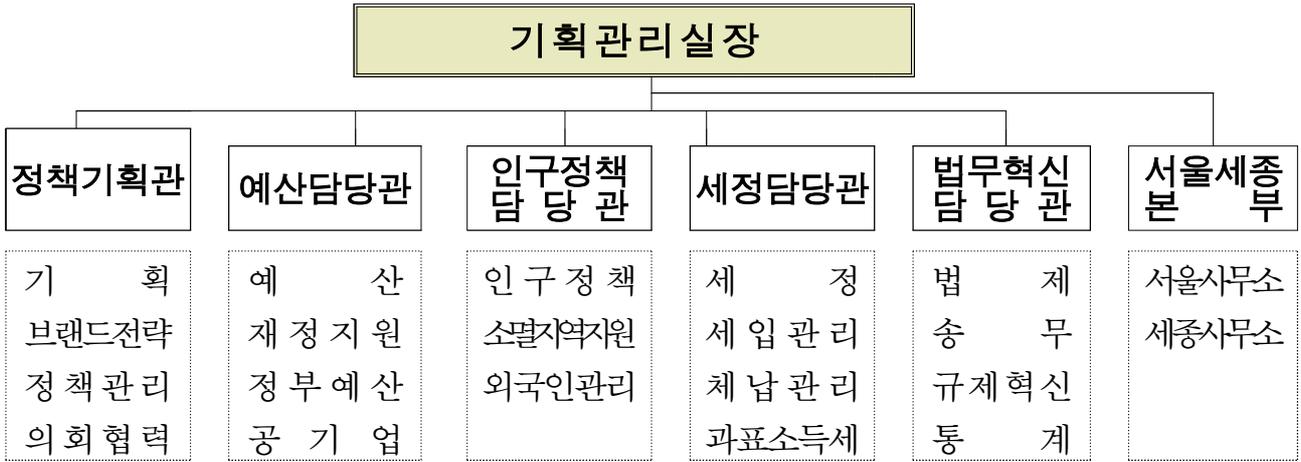


목 차

I. 일반현황	1
II.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4
III.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7
IV.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8
1.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기획 및 개발	8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14
3. 총북인구 증가 기반 마련	19
4.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운영	23
5.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	28
V. 주요 현안사업	34
VI.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39
VII.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1
VIII.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3
IX.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45

1. 일반현황

1 조직 :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본부, 19 팀 · 2 사무소



2 정 · 현원 ('23년 1월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07	107	
정 책 기 획 관	25	25	
예 산 담 당 관	25	25	
인 구 정 책 담 당 관	12	12	
세 정 담 당 관	20	20	
법 무 혁 신 담 당 관	20	20	
서 울 세 종 본 부	5	5	

3 예산현황 ('23년 1월 기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924,545	924,545	0
정 책 기 획 관	7,805	7,805	
예 산 담 당 관	188,986	188,986	
인 구 정 책 담 당 관	37,569	37,569	
세 정 담 당 관	688,522	688,522	
법 무 혁 신 담 당 관	921	921	
서 울 세 종 본 부	742	742	

4 주요 사무

실·과명		주요기능
정책기획관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중앙정부 정책 대응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관리
	브랜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 정책 브랜드 전략 기획 및 홍보 브랜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정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연구용역·충북연구원 활성화 지원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의회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의회 협력 사무 및 도의회 부의안건 처리 5분 자유발언 및 건의·결의문 등 후속조치 관리
예산담당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전망 및 편성·운용 주요 재정제도 운영 및 생점사항 재정합의·조정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운영, 신속집행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운영
	정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예산 확보 종합계획 수립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건의자료 작성 총괄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운영지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금·지방채 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정책위원회 및 충북인구포럼,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소멸지역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문제·저출산 인식개선 문화 확산 지원 등
	외국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실태조사 및 생활안내 등
세정담당관	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정 종합계획 수립·운영 및 징수목표 관리 신세원 발굴 및 도세 부과·징수·감면 운영
	세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운영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결산 등 세입금 관리
	체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세편의 운영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정기, 기획)
	과표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과표 및 지방소득세 운영 지방세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운영

실·과명		주요기능
법무혁신 담당관	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입법안 검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사이버, 이동상담)
	송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행정·민사소송 수행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도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과제(사례) 발굴·관리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통계의 심사·분석 및 공표
서울세종 본부	서울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예산 확보 지원 국회 및 서울소재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추진 충북출신 인사 업무협조 및 사무연락
	세종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예산 확보 지원 및 세종소재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추진 충북출신 인사 업무협조 및 사무연락

5 출자·출연기관

구분	충북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 양성재단	충북학사
설립일	1990. 5. 15.	2006. 1. 16.	2008. 2. 20.	1991. 12. 11.
설립목적	도정 현안의 체계적 조사·분석 및 대안 연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 도모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향토 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제반 편의 제공
자본(기금)	21.7억원	1,301억원	819.7억원	37.5억원
기구(인력)	원장, 1실, 4부, 2분원 (46명)	사장, 본부장, 2실, 8부, 1단 2팀 (85명)	사무국 (6명)	1사무처, 3학사 (59명)

II.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민선8기 로드맵 마련 >>

- (민선7기 모범적 인계 및 민선8기 토대 구축)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해 민선8기의 원활한 출범과 토대 마련을 지원
 - 도지사후보 도정설명회(4월), 인수위 설치 및 운영지원(6월)
 - 도정운영방향 실국장 간담회(9월), 시민단체장 초청 간담회(10월)
 - 도정목표 및 방침 수립 등 민선8기 충북 미래상 제시(7월)
-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논리와 다양한 선제적 활동을 통해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57개 세부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

<< 중부내륙시대 개막을 위한 입법동력 확보 신규 >>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법제화 동력 마련) 법제화를 위한 전략추진체계 구축 및 범도민 역량 결집으로 입법 추진동력 마련
 - 대정부 성명서 발표(8월), 국회 토론회 개최(11월)
 -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11월), 인접시도 협조체계 구축 추진

<< 전략적 재정 및 세정운영 >>

- (최대 정부예산 확보) '23년 정부예산안 도정 사상 최대규모 반영
 - '23년 정부예산 : 8조 3,065억원(전년대비 6,362억원, 8.3% 증가)
 - ※ 연도별 반영규모 : ('20)60,854 → ('21)68,202 → ('22)76,703 ⇨ **('23)83,065억원**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주민제안 한도액 최초 도입 60억원(6개분과)
 - 주민제안사업(8개 사업 48.7억원), 우선순위 선정사업 반영(80.3%)
 - ※ 연도별 우선순위 선정 반영률 : ('20) 75.1% → ('21) 76.3% ⇨ **('22) 80.3%**
- (신세원 발굴) 지방세 규모 확대 및 신세원 발굴
 - 지방소비세 세율 2.7%인상, 소방세 도입 정책연구용역 추진(11월)

《 재정분권 기초 마련 》

- (재정자립도 확보) 지방세 3조원시대 개막
 - (지방재정 분권) 1·2단계 재정분권 추진 → 재정 순확충(1,689억원)
 - '19~'20년 1단계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11% → 21%, 1,332억원)
 - '22~'23년 2단계 :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21% → 25.3%, 357억원)
- ※ 국세 vs 지방세비율 : 77.7 : 22.3('18년) → 73.7 : 26.3('20년) → 72.6 : 27.4('23년)

《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473억원 확보
 - 제천공립한방산후조리원 설립 등 광역계정(6개 시군, 8개사업) 119억원
 -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등 기초계정(6개 시군, 17개 사업) 354억원
- (저출산 공모 및 경진대회 선정) 행정안전부 저출산 공모 확보 및 우수사례 선정
 - 저출산 공모 최종 선정(증평군), 특교세 3억 확보
 - 저출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도), 특교세 16백만원 확보
- (출산육아수당^{공약}) 도내 출산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공약 실천계획 수립
 - 출생아 만0세~만4세 1,100만원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도정혁신 확산 》

- (전국 규제개혁·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전국단위 경진대회 수상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 기관표창, 특교세 80백만원 확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 기관표창, 특교세 10백만원 확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도정발전을 주도한 우수공무원 포상
 - 상반기 24명, 하반기 11명 선발, 실적가점·포상휴가 등 인센티브 부여
- (도정혁신 과제 발굴) 정부혁신 계획에 부합하는 중복형 혁신과제 발굴·추진
 - 혁신 실행계획 수립(3개분야 84개 과제), 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9개)

2 성과에 대한 평가

《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민선8기 로드맵 마련 → 정책 고도화 필요 》

- (평가 배경) 국가 경제발전 기여 및 공익 희생을 국가 차원의 행·재정 지원의 논거로 삼는 지자체 권리 경쟁 심화(→ 보다 전략적 대응 필요)
 - (입법전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 6. 11),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발의('22. 8. 2),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발의('22. 8. 18)
 - (자원확보 경쟁) 물 분쟁, 자원공급망 교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관심 증대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을 통한 백두대간수변지역 규제 완화, 수리권 등 충북 부존자원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민선8기 로드맵 고도화 필요

《 전략적 재정 및 세정운영 → 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 》

- (평가 배경) 불확실한 세입여건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 지출 수요는 급증
 - (세입)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예산 최대 확보 달성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서민경제 회복 재원 적극 반영(증가율 '23년 8.1%)
 - * 정부 총지출 조정 : ('22년) 8.9% → ('23년) 5.2% ✓ '26년 4% 초반대 예상
 - (세출) 민선8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미래 충북신산업 육성과 민생 경제 회복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중요성 확대
- 민선8기 공약사업 및 현안 해결 재원 마련을 위한 新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 및 전략적 재정 운용 필요

《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 정책의 질 향상 집중 》

- (평가 배경) 충북 인구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도 정책의 전환 요구
 -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 지정(6개 시군), 지역별 인구 양극화, 저출산 문제 심화('21년 합계 출산율 0.95명), 인구데드크로스*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필요
 - *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여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우리도 2018년부터 발생)
- 지방 소멸을 막고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출산률 증가를 위한 출산육아수당 등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 필요

III.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창조적 혁신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전략

새로운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기획 및 개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충북인구 증가 기반마련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운영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
-------------------------	----------------	--------------	------------------	---------------------

이행 과제

1.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 시대 개막 선도	1.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자원배분	1.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수립	1.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1.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
2. 브랜드 가치확립을 통한 충북 프리미엄 구축	2.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2. 지역주도 인구활력 증진 및 저출산 대응 문화확산 조성	2. 빈틈없는 세입금 관리를 통한 건전 재원 운용	2.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과 적극적인 소송수행
3.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	3.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	3. 지역 맞춤형 외국인 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지역 정착 지원	3.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세정과 조세정의 실현	3. 도민의 삶과 맞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
4.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충북발전 견인	4. 지방공공기관 혁신 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 자금 관리		4. 공정한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	4. 고품질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IV.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1. 새로운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개발

추진여건

- 팬데믹 이후 新냉전으로 불리는 미 중·러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분업구조의 와해 등으로 국제관계의 유대는 점점 약화
 - 이에 따라 동해안, 서해안 시대 등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축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은 성장한계에 봉착했고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新성장축에 대한 시대적 요구 부상
 - 또한 수도권과 연안에 치우친 경제발전정책이 야기한 국토 불균형과 ‘지방소멸’이라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브랜드화, 행·재정 권리요구 등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
-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을 ‘해안에서 내륙’으로 옮겨 충북 주도의 新경제성장축인 「중부내륙시대」 개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과 충북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선도**



이행과제

- ①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선도
- ② 브랜드 가치 확립을 통한 ‘충북 프리미엄’ 구축
- ③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
- ④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충북 발전 견인

①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선도

1-1.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기반 구축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신규}

- (법제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을 위한 전략 추진체계 구축 및 범도민 분위기 조성 추진
 - 국회의원 협조체계 구축, 토론·공청회 개최, 타당성 논리 보완
 - * 법안 상정 후 조속한 심의 건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견 검토 및 대응
- (추진동력 확보)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입법 당위성 제고^(상반기)
 - ※ 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22. 11. 18.) 후 시군별 토론회, 범국민서명운동 등

□ 중부내륙연계지역 공동의제 및 협력사업 발굴^{신규}

- (의제발굴) 중부내륙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발전방안 마련*
 - * 중부내륙연계협력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22. 12. ~'23. 2)
- (공조체계 구축) 광역협의회 등을 통한 중부내륙지역 공조체계 구축

1-2. 충북의 내·외적 성장 모멘텀 마련

□ 선제적 도정운영과 현안 해결로 내적 성장 주도

- (선제적 도정운영)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한 업무계획 수립^(하반기) 및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공유·소통 기회^(연중) 마련
- (체계적 현안대응) 체계적 현안관리와 논리개발로 정부·국회와 적극 소통^(연중)하고 현안해결을 위한 창의조직 생성 지원^(연중)
 -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간담회, 정당 정책협의회, 건의활동 등

□ 대외 연대·협력을 통한 외적 성장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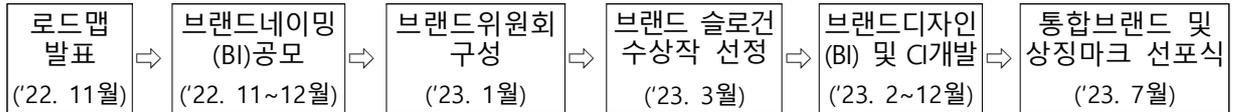
- (연대 및 협력)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활용한 충북 발전정책의 지자체 공동의제화 추진 및 대정부 건의활동 주도를 통해 충북 위상강화^(연중)
- (네트워크 강화) 서울세종본부 중심의 적극적 대외 동향 파악·대응^(연중)

② 브랜드 가치 확립을 통한 '충북 프리미엄' 구축

2-1. 미래 100년을 이끌 '정책 브랜드' 구축

□ 정책 브랜드 전략기획 및 홍보로 민선8기 정체성 확보 신규

- (통합브랜드 및 상징마크 개발) 민선8기 정체성 확보와 도정방향에 대한 도민결속 강화를 위한 통합 브랜드 및 상징마크 개발



* 소요예산 : 300백만원, 2023년 본예산 반영 완료

- (행정사항)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개정, 브랜드이미지매뉴얼 제작·확산
- (대도민 홍보) 전국단위 홍보활동 추진(언론홍보, 대도민 홍보 등)
* 전국 234개 기관 협조공문 발송,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옥외광고 추진 등

2-2. 164만 도민과 공유하는 '소통 브랜드' 확대

□ 스마트 소통을 통한 도정방향 공유와 도민 결속력 강화 신규

- (스마트 홍보관) 반응형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서비스 등 '작은 공간 속 큰 스마트 홍보관' 확대 구축
 - (1단계) 본관 및 서관 → (2단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구축
 - * 오송역, 청주공항, 관광명소 등 충북도민 및 외지 방문객 주요밀집지역 대상지
- (온라인 도청)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으로 도청·의회 아바타 견학 체험 플랫폼 조성 등 경계를 허문 실감형 콘텐츠 정책 홍보 서비스 제공

2-3. 민·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 브랜드' 구축

□ 파트너십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홍보 극대화 신규

- (브랜드위원회) 전문가 그룹을 통한 브랜드 위원회 및 자문단 조성
* 충청북도 상징물 체계 점검 및 브랜드 전략수립·발굴
- (청년 브랜드참여단)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콘텐츠 발굴
- (브랜드 민관협력) 도민·기업의 상징물(브랜드) 사용 승인 규제 완화 등

③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

3-1. 새로운 정책개발로 성장과 재도약의 발판 마련

-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
 - (민선8기 도정 종합계획 **신규**) 도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로드맵 수립과 충북의 새로운 비전 제시
 - (선포식) 충북 핵심비전에 대한 도민 공유 및 대외적 선포^(상반기)
- 정책연구용역 품질 제고 및 활용도 강화
 - (체계적 관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연 5회정도), 진행상황^(분기별) 점검 및 사후관리^(평가-점검-공개) 등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활용도 제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및 국비 확보 등 종합성과 평가시 활용도 배점 상향 * (도정기여도 배점) '22. 10점 → '23. 20점
- 지역정책연구 플랫폼인 충북연구원과 도정협력 강화
 - (조사·연구) 산업·경제, 공간, 환경, 지방재정 등 지역 정책모델 제시 및 위드코로나, 탄소중립, ESG 등 정책전환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 수행
 - (도정 핵심정책 연계) 다양한 도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기본.창의.기획과제, 정책 및 수탁과제, 정책동향 분석, 도정이슈 대응 등 수행

3-2.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 점검시스템 가동으로 성실한 약속 이행
 - (관리체계 구축)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자체평가^(1회)로 공약 이행을 제고
 - (평가위원회 운영)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개최^(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 외부평가 실시 및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홈페이지 공개) 추진상황 및 실천계획 변경사항 등 투명 공개
 - (외부평가 대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외부 공약평가 대응
 - (도민배심원제 도입) 도민참여 보장 및 민주성 강화를 위한 도민배심원제 신설

3-3.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으로 상위권 진입

- **20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최종점검 및 평가결과 환류**
 - (대응 및 분석) 평가자료 시스템 입력^(1월) 및 평가결과 분석
 -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위한 도-시군 담당자 등 포상^(5~11월)
- **2024년('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전방위적 대응으로 실적 제고**
 - (대응방안 수립) '24년 평가 대응 및 추진계획 수립^(3월)
 - (실적관리) 지표별 실적카드 점검^(매월)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4회)
 - (기술지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회) 및 디자인 컨설팅^(12월)
-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 및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시군종합평가 운영**
 - (제고방안 마련) 국도정 주요시책 효율적 추진계획 수립^(5월)
 - (인센티브) '23년('22년 실적) 평가결과 시군 인센티브 지급
 - (소통기회) 대응전략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도 및 시군 담당자 연찬회 개최^(하반기)

3-4. 협력과 소통 중심의 정책결정 및 도정운영

- **도정 분야별 정책 추진방안 수렴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 (도정자문)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주요정책 입안·추진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10개 분야 100명 구성('22.10.27.)
 - (정책발굴·제안)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민 중심의 「민·관합동 정책포럼」 개최^(상반기)
- **공정한 도정 참여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 (공정한 구성) 위원회의 전문성 범위에서 성별, 지역, 중복참여 최소화 등 참여기회 공정성 및 균형성 확보
 - (효율적 운영)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분기별) 및 실적 제고, 실적 부진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유사·중복시 대행 및 폐지, 비상설화 등) 추진

4]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중복 발전 견인**

4-1. **도정현안과 연계한 회기 운영 지원과 의회 정책 제안 도정 반영**

- **도정현안 해결과 적시 업무추진을 위한 회기 운영 지원**(정례회 2회, 임시회)
 - (맞춤형 안건 제출)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예산·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도정현안과 회기일정에 맞는 시의성 있는 안건 제출
 - (안건처리 적극 협의)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 관련 정보 제공 등 수시 협의
- **도정에 대한 의회 정책 제안 관리 및 도정 반영 추진**
 - (의회 의견 관리 및 도정 반영)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상황 정기 검토(연 3회)로 도정 정책 반영 현황 관리
 - (자료 제공) 서면질문, 서류제출 요구(수시)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 **도정과 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여건 조성**
 - (도민 의견 수렴) 도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적극 참여
 - (현장방문) 상임위, 특위 등 주요사업장 점검 관리 방문 지원

4-2.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현안해결 공동 대응**

- **도정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
 - (정책간담회) 도지사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등 간담회(수시)를 통한 현안 정보 제공·공유로 도정 추진 협력체계 확보
 - (현안해결 공동대응) 대외적 현안 해결과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집행기관·의회 공동 대응
- **위원회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상시 소통체계 유지**
 - (수시보고)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위원회별 주요 도정에 대해 실·국장 책임하에 수시 보고 등 정보교류 강화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추진여건

-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재정 강화’로 전면 전환
-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으로 세수여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지속으로 불확실성 상존
- 민선8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 및 민생 경제 역동성 회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정책방향과 함께하고 민선 8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필요**



이행과제

- ①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 자원배분**
- ②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 ③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
- ④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①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 자원배분

1-1. 책임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재정의 건전성 제고

-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모든 투자사업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 불요불급한 예산, 성과부진사업 폐지 등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
- (효율적 자원배분) 절감재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지역경제 회복·미래 도약사업에 집중투자

□ 성과중심 재정운용

- (재정성과 실효성 제고) 재정사업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 주요사업·행사성경비·보조금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 보조금 및 행사성경비 총액한도제 운용으로 재정건정성 확보
- (성과예산 운용)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내실있는 운영

1-2. 수요자 중심 투명한 예산운용

□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주민제안 한도액 운영(6개분과, 각 10억원), 도민제안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민 참여 활성화
- (투명한 재정운용) 도민입장 관심항목 재정공시(예산공시 2월, 결산공시 8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로 재정 투명성 제고

□ 수요자 중심 예산운용

- (성인지예산) 양성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
- 성인지 예산 분석용역 강화(중점관리사업 집중 모니터링)
- (찾아가는 예산컨설팅) 수요중심 맞춤형 예산 컨설팅 확대 운영
- 직속기관·사업소 1기관 1방문 추진(현장 애로사항 의견 청취)

②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2-1.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 안정적 교부세 확보

- (보통교부세) 지역균형 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군 전략회의 개최(1회)
-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재난안전 수요 등 사업 지속 발굴·반영
-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4회)

□ 효율적 균특회계 및 전환사업 운영

- (균특회계)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 가능 사업* 발굴·운영
* 24개 포괄보조사업
- (전환사업)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 전환사업 운영
- 1단계 39개 사업 1,480억원, 2단계 41개 사업 834억원

2-2. 건전성 제고 및 재정효과 극대화

□ 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사전심사 강화

- (투자심사)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를 통한 재정낭비 최소화(연 4회)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2023년~2027년(5년간) 연동화 계획 수립(8월~10월)
-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6회)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신규}

□ 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석·진단 및 위기관리

- (재정분석)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
-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13개 지표
- (재정위기시스템) 5개 분야 6개 지표의 사전점검(분기별)으로 재정위기 선제적 대응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적극집행

- (적극집행) 상반기 65% 이상, 하반기 88% 이상 목표
- (소비투자) 분기별 4회(43개 예산통계목 중 목표설정액의 105% 이상)

③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8조4천억원)

3-1. 민선8기 역동적 도약을 위한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발굴·반영

□ 민선8기 조기 안착을 위한 분야별 신규사업 발굴

- (효과적 발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업무계획 분석(26개 부처)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방향 설정 및 지자체 벤치마킹(16개 시도) 실시
- (분야별 발굴) 道 신성장 동력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및 정부정책방향(디지털, 탄소중립, 인재양성 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 최대 반영

- (부처 최대반영) 국정과제, 대통령공약, 국가정책과 연계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건의 및 반영 추진
- (지역 인적자원 활용)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도·시군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최대 반영 추진

3-2. 기재부 심의 대응시스템 강화 및 국회 추가 반영

□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재부 심의 대응

- (적기대응) 기재부 심의(6~8월) 단계별 대응 계획수립 및 대응 활동 추진으로 미반영사업 반영 및 반영사업 삭감 방지
- (선택과 집중) 분야별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의 활동 추진

□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한 국회 추가 반영

- (공조강화) 지역구 국회의원(8명) 및 충북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와 수시 방문 건의를 통한 지역 주요 사업 반영
- (핵심공략)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국회의원 집중 설명·건의를 통한 국회 추가 증액

4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4-1.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 유도로 경영성과 지속 제고

□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반 강화

- (공익 실현) 경영평가(2~8월)를 통해 ESG 경영원칙과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9월)로 책임성·투명성 제고
* (평가대상) 행안부 주관 4개(공사,공단), 도 주관 8개(시군 상수도)
- (재무건전성 강화) 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9월), 부채 비율 관리 철저(200%) 및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 배점 확대 추진
* (부채) 134.1%(‘21년 결산 기준)

□ 출연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평가 강화 실시

- (경영평가) 공공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 실시(2~6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로 자율적인 개선유도 등 책임경영 확립
* (평가대상) 총 13개 출연기관 중 10개 기관(개별법에 의한 평가기관 제외)
(평가환류) 출연기관 경영평가 전략회의 개최(하반기)
- (컨설팅 지원) 신설·통합 출연기관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실시(지방공기업평가원 협업 추진) 신규

4-2. 안정적인 재무관리 및 기금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철저한 부채관리로 적정 채무비율 유지

- (관리체계) 내실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채무비율 지속 관리
*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54% (‘21년 결산 기준, 25% 초과 ‘주의’, 40% 초과 ‘심각’)

□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 및 자금의 적시 활용

- (성과관리) 기금운용 성과분석(7~11월), 수입 징수내역 관리(매월), 기금운용 부실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2회) 등 기금운용 총괄관리 철저
* (도에서 운용 중인 기금) 총 14개 기금(법정기금 3개 포함)
- (자금활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균형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 도모

3. 충북 인구증가 기반 마련

추진여건

- 저출산 현상 심화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점으로 인구 정체기를 거쳐 '40년 이후 인구 수축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도내 6개 시군 인구감소지역지정),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중단되었던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K-컬처에 따른 관광객 증가 및 외국인 근로 인력 채용 재개에 따라 폭증 예상
- **초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인구를 넘어 생활인구로의 확장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수립 필요**



이행과제

- ①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확립**
- ② **지역주도 인구활력 증진 및 저출산 대응 문화확산 조성**
- ③ **지역맞춤형 외국인 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지역 정착 지원**

①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확립

1-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개발

□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추진

- (시행계획)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에 관한 정책 등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구지표) 인구·저출산 관련 지표 관리 및 분석

□ 인구문제 인식 및 극복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인구의 날 기념식) 유공 표창, 인구교육 특강 등
- (충북인구포럼) 주제발표, 토론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1-2. 임신·출산 가정의 삶의 질 제고

□ 임신·출산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 (출산육아수당^{공약}) 도내 출생아 1,100만원 지원
* 출생아 1명당 출생 첫해 300만원, 2~5년차 각 200만원 지급 (만0세~만4세)
- (첫만남이용권) 출생 첫 해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1-3.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

□ 저출산 대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력체계 구축) 저출산 정책 종합적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시행 협력체계 구축

□ 정부 저출산 정책과 발맞추는 저출산 계획 수립

- (시행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3 시행계획 수립
- (정책개발) 도내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발굴
- 다자녀기준 확대(세자녀→두자녀)에 따른 지원 정책 발굴

□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적극 개발

- 저출산 대응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사업 발굴
- 도내 저출산 대응 정책 우수사례 개발 및 경진대회 응모

② 지역주도 인구활력 증진 및 저출산 대응 문화확산 조성

2-1.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3~'27년) 수립 연구 용역 시행
-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23년 시행계획 수립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단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 (장기투자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한 장기 투자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4년 투자계획)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24년 투자계획 수립

□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 사업 추진

- (자체)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및 원스톱 신청 서비스 제공
- (보조) 제천 한방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11개사업(6개 시군)

□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응모

- (우수사례발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시군 우수사례 사전심사

2-2. 저출산·고령화시대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지원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지역문화 조성

-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도내 중소기업 제도 구축·교육 지원
- (충북 100인의 아빠단) 온·오프라인 통한 아빠 육아 참여 확대

□ 도민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저출산 극복 문화 확산

- (도민 인식개선 교육) 저출산·인구문제 순회교육 실시(90회/3,000명)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생명 지킴이 교육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캠페인 시행

③ 지역맞춤형 외국인 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지역정착 지원

3-1.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신규}

□ 지역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정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시행계획 수립
- (정책개발) 국내유입 외국인의 지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차별화된 외국인 정책 개발

□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 작성

- (실태조사) 지역내 외국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3-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외국인 유입 촉진^{신규}

□ 외국인 우수인재 및 동포가족의 정착 촉진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 우수인재의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 체류 특례 부여

□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추진

- (생활안내) 다문화센터와 협업을 통한 도내 거주 외국인의 원활한 지역내 정착 지원 사업추진
 - 외국인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 외국인 언어교육 및 자녀 학습지원 등 적응교육 실시
- (일자리지원)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지역정착 외국인에 대한 일자리 미스매칭 사업장 우선 안내 추진

4.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운영

추진여건

- 세계 경제는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유발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신냉전주의 심화 등 해외발 위험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성장세 약화가 전망됨
- 국내경기는 소득여건 개선과 일상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절벽 등으로 큰폭의 세수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징수 강화, 신세원 발굴, 탈루세원 징수, 과표의 합리적 산정 등 추진 노력 필요**



이행과제

- ①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 ② **빈틈없는 세입금 관리를 통한 건전 자원 운용**
- ③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세정과 조세정의 실현**
- ④ **공정한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

①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1-1. 세입목표 달성 및 신세원 발굴

- **도세 징수목표액 1조 8,773억원 달성('22년 최종예산 比 +1,003억원)**
 - (주기적 징수전망 실시) 징수실적 분석, 세수여건 변화를 반영한 징수전망 실시로 세입예산 적기 대응(분기별)
 - (우수 시·군 포상) 도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포상으로 시·군 징수 노력 유도, 징수율 제고(상반기)
 - (비과세 감면 관리) 비과세·감면을 적정 관리(13% 이하)를 통해 지방세 지출효율성 제고(연중)
 - (고액 환급금 관리^{신규}) '일정금액' 이상 고액환급금 사전컨설팅 실시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연중)
- **지방세입 기반 확충**
 - (신세원 발굴)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연중)
 - (도·시군 협의회 운영) 충북 지역특성에 맞는 세수확대 방안 모색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분기별)

1-2. 소통강화를 통한 도민 중심의 세정운영

- **도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
 - (충북세정포럼 개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과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계기 마련(연1회)
 - (마을세무사 운영)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연중, 마을세무사 28명)
- **세무공무원 직무전문성 강화**
 - (세정 연찬회 개최) 시군별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연구·연찬 기회 마련 및 세무행정 우수사례 확산(연1회)
 - (브레인스토밍) 직원 상호간 업무 공유와 직무역량 제고(분기별)

② 빈틈없는 세입금 관리를 통한 건전 재원 운용

2-1. 투명한 세입금 관리 강화

□ 철저한 세입금 분석 관리

- (시스템 활용)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입금 현황의 주기적 분석과 철저한 관리(매월)
- (세입금 결산) 세입금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질없는 전년도 세입금 결산 추진(상반기)
- (통계 작성) 정확한 세외수입 통계 작성으로 세외수입 연구 및 정책 발굴의 효율성 제고(6월~10월)

□ 효율적 세입금 관리를 위한 전자납부고지서 전면 도입^{신규}

- (처리기간 단축) 전자납부고지서 도입(상반기)으로 세입금 처리 기간 단축(10일 이내 처리 → 실시간 처리), 효율적 세입금 관리 가능
- 세외수입 OCR고지서 및 수기수납 사용 폐지
- (정확성 제고) 이중 수납 및 세입금 과목오류 발생 등 최소화

2-2.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적극적인 징수활동)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2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 (신속한 채권 확보) 재산조회(부동산·차량) 및 신용정보를 활용, 급여·직장 조회 등 신속한 채권 확보 강화(수시)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제고를 위한 지원

- (체납액 징수지원) 실·과·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2회)과 체납액 분석 및 관리현황 정기 점검(수시)
- (직무교육·인센티브)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2회) 및 우수사례 공유,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1회)으로 체납액 징수 지원

③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세정과 조세정의 실현

3-1. 지방세 체납액 전략적 징수를 통한 공정세정 실현

□ 고액·상습체납자 중심 징수활동 추진

- (고액체납 집중관리)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 확대 및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 강화
 - 수입 명차 리스, 사업·생활실태 등 종합분석으로 호화생활 영위 조사
- (새로운 징수기법 추진^{신규}) 지능적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선제적 채권 확보를 위한 엄정한 행정대응
 - 대여금고, 미사용 수표, 공제회 적립금 등 은닉재산 환수 조치

3-2.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세무조사 운영

□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성실납세문화 조성

- (정기조사 효율화)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1천만원 이상 감면 법인 중 2개 이상 시군에 연관된 대형법인 선정 조사
 - 도·시군 합동조사로 효율성 제고, 중복조사 방지 등 법인부담 경감
- (기획조사 강화) 고액물건 취득 후 장기간 미신고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탈세 취약부문 7개 분야 선정 전수조사
 - 신고누락(상속·지목변경·시설물 등), 감면관리(농업·산업 등)
- (민생경제 지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일정 기업 선택, 조사결과 조기결정 신청을 운영하고 우수기업 등은 조사유예
 - 고용, 노인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대상 우수기업 등 조사유예

3-3. 납세자와 소통하는 납세환경 조성

□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지원

- (납세서비스 강화) 전자고지, 각종 전자납부 서비스 도민홍보 강화 및 도내 주요 거주 외국인(약 4만명) 대상 맞춤형 납세홍보 추진
 - 5개국 외국인 대상(6개 언어), 외국어 표기 납세안내문 배포

4] **공정한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

4-1.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및 납세자 친화환경 조성

□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 (개별주택가격 공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및 각종 과세 부과기준 제공(4월, 9월)
- (시가표준액 고시) 객관적 시장가격을 반영한 건축물(6.1.기준) 및 기타물건(1.1기준)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정기 및 수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 사전 공개 및 의견제출로 투명성 제고(2월)

□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 지원**

- (납세환경 조성)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신고 환경 제공, 전자신고 도움창구 운영(세무서·시군), 안내책자 제작·배포
- (안내·홍보 강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정착을 위한 종합소득 신고 전 사전안내문 발송, SNS·언론 등 다각적 홍보

4-2.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불복청구 지원 확대**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납세자 구술심의 원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불복청구 심의·의결(연중)
 - 주심제도(전문검토위원회) 운영으로 고액·쟁점 안건 심리 강화
 - 납세자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대리인(조세전문가) 제도 운영(3명)
-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사례 공개^{신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작성요령 및 불복사유서 작성사례 홈페이지 공개(연중)
- (조세심판 지원) 면밀한 법리분석과 사례검토로 공정한 업무 지원(연중)

5.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

추진여건

- 민선8기 도정의 성공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의 적시 입법과 도민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
- 행정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적극적 권익보호에 대한 도민의 기대 상승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익구제제도의 운영 필요
- 도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신나게 변화하는 도정을 위해 과감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필요
- 지역 경제구조 파악과 사회적 실태변화 등 통계의 활용 가치 상승에 따른 다양화·세분화 필요

→ **도정의 성공적 추진기반 마련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적극 추진**



이행과제

- ①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
- ②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과 적극적인 소송수행**
- ③ **도민의 삶과 맞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
- ④ **고품질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①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

1-1.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관리)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한 주민발의 조례, 감사청구 관리 지원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검색 기능 고도화
- (법률상담)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대면·전화·사이버 등 상담 창구 다각화, 현장 중심의 이동 법률 상담실 확대 및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지원(충북변호사회와 협업)

1-2.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무 역량 제고

□ 고품질의 자치법규 법제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적시 입법)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지사 공약 등 도정 주요 현안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조속 마련을 위해 입법절차 신속 진행
 - 조례·규칙심의회 탄력적 운영, 법령 필수위임 조례 수시 정비 병행
- (입법컨설팅 강화) 도, 시·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사전심사 및 의견제시로 조례·규칙의 적법성 및 정합성 제고
- (어려운 용어 정비^{신규}) 도의 자치법규 속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일괄 개정

□ 법규입안 및 해석 능력 배양으로 법제 실무능력 함양

- (교육지원) 도, 시·군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법령의 이해도 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 밀착형 순회 법제교육(법제처 협업) 추진

1-3.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소청심사제도 운영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불이익 구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정기한 준수(60일) 및 심리사건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②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과 적극적인 소송수행

2-1.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심판 운영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기간단축) 신속한 심리·재결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도민 권리구제 강화 및 분쟁 조기 해소
- (신뢰성 확보) 행정심판 심리 과정 및 재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술심리 참가 기회 확대 및 현지 확인 강화

□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도민 편의 증진

- (시스템 운영) 신속·편리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으로 온라인 심판청구 확대 및 처리과정 실시간 정보 제공
- (사례공유) 최신 재결례 및 청구서 작성 사례 등 홈페이지 게시로 도민 알권리 충족

□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확대

- (국선대리인 지원)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 ** 법정 지원대상 외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집행정지) 청구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행정지 적극 검토 및 생계형 청구사건(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직권 집행정지 결정 확대

2-2.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행정질서 확립

□ 논리적·체계적 변론수행으로 승소를 제고

- (적극대응) 핵심증거 조기 확보 및 판례검토를 통한 쟁점사건의 논리적 대응으로 소송부담 경감 및 소송대응 효과성 제고
- (역량강화) 유형별 소송사례 홈페이지 공개 및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를 통한 소송대응 능력 향상

□ 행정처분의 적법성·타당성 사전검토로 쟁송 최소화

- (정보제공) 전자법률도서관(법령, 판례, 부처별 행정자료 등) 서비스 제공으로 법률 정보 활용 지원
- (법률자문) 고문변호사(5명)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으로 도정 수행의 적법성·신뢰성 제고

2-3.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선제적 권익보호) 고충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권리보호(감면안내, 환급 등) 추진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업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방세 감면 안내
- (제도홍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제도의 인지도·활용도 제고

③ 도민의 삶과 맞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발굴·개선 및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장 맞춤형 규제 발굴·개선

- (규제 정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심사로 불합리한 규제 선제적 예방,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정비 활성화
- (규제 발굴·개선)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 발굴·개선
-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기업·도민의 불편·부담 규제 도민 공모, 지방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위원회, 도 규제개혁협의체 운영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으로 도민 체감도 향상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정부 적극행정 계획에 부합하고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직사회 내 모범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전파함으로써 도민 신뢰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전문성을 강화한 주민참여형 위원회 운영으로 추진동력 내실화

3-2. 새롭게 변화하는 도정운영을 위한 혁신문화 조성

□ 도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제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혁신 실행계획 수립) 정부혁신 계획에 부합하고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충북형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충청북도 혁신 실행계획’ 수립
-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에 기여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 (공공자원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도민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공유누리’ 및 연령별·주제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금24’ 운영

□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

-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조직 내 2~30대 젊은 직원들로 이루어진 혁신 모임을 구성하여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활동 전개
- (혁신 워크숍 개최) 조직 구성원 상호간 이해·소통을 위한 워크숍 추진

4] 고품질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4-1.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진단을 위한 통계 작성

□ 경제통계 조사로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 마련

- (사업체조사) 도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
 - 도내 190,628개 사업체 대상, 10개 항목(연간매출액, 종사자수, 사업 종류 등)
- (광·제조업조사) 광제조업의 구조, 산업활동 등 경영상태 조사
 - 도내 3,026개 광·제조업체 대상, 13개 항목(종사자수, 매출액, 재고액 등)

□ 지역경제 진단·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통계 작성 및 개발

- (시·군 지역내총생산) 시·군 경제 산업규모 분석을 위한 지역내총생산 작성
- (시·군 소득지표) 시·군 경제활동의 소득분배 상황 파악을 위한 지표^{신규}
 - 법인, 개인, 정부부문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 140개 항목 / 시산 및 분석 완료('23 ~ '25)

4-2.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및 데이터 제공

□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생산

- (청년통계) 청년층(19~39세)의 경제활동, 소득·부채, 주택소유 등 파악 분석
- (사회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사회변화 예측을 위한 사회조사 추진
 - 도내 11,604가구 만 15세 이상, 7개 분야 55개 항목
- (주민등록인구) 등록인구 기반 인구추이, 연령 구조 등 분석
- (기본통계) 도정 17개 분야별 통계데이터 수집·생산 및 보고서 발간

□ 통계품질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 (자체품질진단) 생산통계의 품질진단 강화로 이용자 신뢰도 향상
- (통계정보서비스) 신속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데이터 활용성 증진
 - 통계보고서 8종, 통계DB, 통계 시각화 등 통계자료 통합 제공

V. 주요 현안사업

1. 중부내륙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화 추진 신규

□ 추진배경(필요성)

-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계협력과 확산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
- (농촌지역 살리기) 각종 교통망에서 소외,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 (국가 신성장 동력) 첨단 산업(반도체, 바이오 등), 백두대간 및 호수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新 성장 동력으로 역할

□ 중부내륙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 (국가 책무)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중부내륙지역이 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재정적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대정부 성명서 발표(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 '22. 8. 31.
- 입법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전체회의 : '22. 9. 30.
- 국회토론회 개최 : '22. 11. 7.
-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 : '22. 11. 18.
- 민관정 공동위원회 남, 북부권 토론회 : '22. 12. 23.
- 정우택 부의장 특별법 발의 : '22. 12. 28.

□ 향후계획

- 특별법 통과 서명운동/ SNS 릴레이 챌린지 : '22. 1월
- 국회토론회 개최 : '22. 1월~2월
- 연계협력 시도와 공동성명서 발표 : '22. 2월

부서명	정책기획관	담당자	행정6급 이아영 ☎ 2112
-----	-------	-----	-----------------

2. 2024 정부예산 확보 추진

- 확보 목표액 : 8조 4,000억원
 ※ 전년도 확보액 : 8조 3,065억원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액	5조 2,000억원	5조 5,000억원	6조 1,000억원	7조원	7조 8,000억원
확보액	5조 4,539억원	6조 854억원	6조 8,202억원	7조 6,703억원	8조 3,065억원

□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1~5월) : 신규사업 발굴 및 부처별 예산(안) 반영
 - 부처별 예산(안) 작성 제출(각 부처→ 기획재정부, 5. 31일 恨)
- 2단계(6~8월) : 기재부 심사동향 파악 및 반영활동 총력 전개
 - 정부예산(안) 작성 제출(기획재정부→ 국회, 9. 3일 恨)
- 3단계(9~12월) :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증액
 - 정부예산(안) 심의·의결(국회, 12. 2일 恨)

□ 향후계획

- 대규모 프로젝트 및 혁신성장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 철저한 사전절차(예타 선정 및 통과, 투자심사 등) 이행
-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발빠른 국비 확보활동 전개

부서명	예산담당관	담당자	행정6급 서태성 ☎ 2232
-----	-------	-----	-----------------

3. 출산육아수당 지원 **공약**

□ 개 요

- 사 업 명 : 출산육아수당 지원
- 사업규모 : 출생아 8,200명 ※ 2021년 도 출생아 수 기준
- 총사업비 : 23,465억원(국비15,100 도비3,698 시군비4,667) ※ 5년간
- (자체) 출산육아수당 : (“23년) 246억원(도98억원, 시군148)
- 사업내용 : 국가지원사업과 연계한 출산육아수당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소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출 산 육 아 수 당	국비 연계 사업	첫만남이용권	200	200					
		보육료	964		527*	437			
		누리과정	1,008				336	336	336
		아동수당	720	120	120	120	120	120	120
	부모급여	1,800	1,200	600					
자체 사업	출산육아수당	1,100	300	200	200	200	200		
합 계		5,265 (최대)	1,820	920 (최대)	757	656	656	456	

*만1세 보육료와 부모급여는 병급 불가

□ 추진배경(필요성)

- (자녀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해
충북 출생아 수 상승 기대 및 인구 유입 유도
※ 도내 출생아수 ('17)11,394명 ('18)10,585명 ('19)9,333명 ('20)8,607명 ('21)8,200명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도내 출산·육아기 가정의 삶의 질 향상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군간 재정분담 관련 협의 → 적극적 협의 노력 지속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출산육아수당 공약 관련 시군 부서장 협의 및 의견 수렴('22.10.)
- 사업협의를 위한 시군 부단체장 영상 회의('22.10.)
- 사회보장협의 신설요청('22.10.) 및 관련 자료 보완('22.12.)
- 출산육아수당 집행 세부 계획 및 지급 지침 수립('22.12.~'23.1)

부서명	인구정책담당관	담당자	행정7급 이승혜 ☎ 2883
-----	---------	-----	-----------------

4. 지방소멸대응기금

□ 추진배경(필요성)

- 균형발전특별법('20.11.) 및 시행령 개정('21.6.)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근거 규정에 따라,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지역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배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투자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27,801,102천원(대응기금 100%)
- 사업규모 : 자체사업 1, 시군 보조사업 11개
- 사업내역

구분	사업명	배분액(억원)		
		계	'22	'23
	총계	278	119	159
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	3		3
제천시	제천 공립 한방산후조리원	41.6	17.1	24.5
보은군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47.7	19	28.7
옥천군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	23	13	10
	옥천 공동체허브 육성('누구나' 센터 증축 및 공동체 육성)	10	2	8
	청년이음터 조성(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10	4	6
	옥천 공동체허브 육성사업(기초)	1.6		1.6
영동군	영동군 청년지원센터	44	20	24
	간이시외버스정류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기초)	1.7		1.7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지원	46.6	20	26.6
단양군	단양 다리안 D-CAMP 워케이션 조성	47	24	23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기초)	1.8		1.8

□ 추진현황

- 투자계획 수립 시군 회의 개최 : '22. 2. 11.
- 투자계획(광역, 기초) 수립 및 제출 : '22. 5. 30.
-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대면평가 : '22. 7. 7.
- 광역·기초지원계정 배분액(안) 확정 : '22. 8. 16.
-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추경예산 편성 : '22. 9. 28.
-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사업비 교부 : '22. 10.

부서명	인구정책담당관	담당자	행정6급 유소희 ☎ 2882
-----	---------	-----	-----------------

5. 2023년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

□ 목표액 : 1조 8,773억원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당초(A)	추경(B)	(D)	당초(D-A)	(증감율)	추경(D-B)	(증감율)
도세 계	16,700	17,770	18,773	2,073	(+12.4%)	1,003	(+5.6%)

□ 최근 5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액 (당초예산)	9,457	10,321	10,697	13,230	13,732
징수액	10,664	11,347	12,904	15,560	17,609

□ 세수여건

- (총괄) 부동산 경기침체로 '22년에 이어 취득세수 약세 예상되나, 소비증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으로 지방소비세수가 증가하여, 총 세수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 전망
- (국내 경제)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성장흐름 약화 예상
- (부동산경기)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경기침체 지속 전망
 - * 기준금리 : '21.7월 0.5% → '21.8월 0.75% → '22.1월 1.25% → '22.8월 2.50% → '22.10월 3.0% → '22.11월 3.25%
 - * 22.1~10월 부동산 매매거래량(전년동월비) : (주택) △38.5%, (토지) △20.0%, (건축물) △15.8%

□ 추진계획

- 주기적으로 징수실적 분석 및 세수전망 실시 (분기별)
 - 진도비 분석을 기초로, 부동산경기·세제개편 등 반영하여 세수전망
 - 세입예산 적기 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 도모
- 납세홍보 강화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강력 징수 (연중)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징수 (연중)

부서명	세정담당관	담당자	세무6급 김남숙 ☎ 2753
-----	-------	-----	-----------------

VI.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지방세 분야

□ 주요내용

제 목	주요 내용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3.7%에서 25.3%로 인상* * '21년 21% → 현행('22년) 23.7%(+2.7%p) → '23년부터 25.3%(+1.6%p)
② 취득세 과표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취득 및 원시취득 시 신고한 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 없이 실제 거래가액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개선하고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선 *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등
③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 * (종전) 5월 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④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해 특례(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신설 * 창업기업, 사업장 신설 및 이전 기업, 사업전환 기업
⑤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을 일부 시설(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
⑥ 체납자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정책 수립추진 연계 제도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계유지 곤란의 사유로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출산육아수당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한 영유아
지원내용	✓ 만0세 300만원, 만1세 200만원, 만2세 200만원, 만3세 200만원, 만4세 200만원 총 1,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출생일 포함 3개월 이내 (미정)
지급기한	✓신청 후 1개월 후(미정)

□ 기대효과

- 출산·영유아기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문제 개선으로 출생률 상승 기대
- 청년 인구유출 방지와 인접시군 전입인구 증가 유도
-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에 인구 감소에 대응

3.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도민 누구나
운영방식	✓월 2회, 변호사 상담 진행
운영장소	✓도 공감마당(신관 2층)
신청방법	✓(전화신청) 도 법무혁신담당관실 전화 신청(220-2314)
상담내용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부동산, 형사, 세금, 행정 등) 무료상담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

□ 기대효과

- 도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법률애로사항 해소 및 도민들의 권익 보호

VII.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질문의원	소 속	정책복지위원회	질문일자	2022. 9. 15.						
	성 명	이상정	관리번호	403-01-01 403-01-02						
질문제목	현금성 복지공약 추진 (육아수당 월100만원 지급,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									
소관부서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성 복지공약 중 육아수당과 출산수당 추진계획 									
추진상황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11개 시군 ○ 사업기간 : 2023 ~ 2027 ○ 사업규모 : 출생아 8,200명 ※2021년 도 출생아 수 기준 ○ 총사업비 : 총23,465억원(국비15,100 도비3,698 시군비4,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23년 출산육아수당 : 266억원(도98, 시군148)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의 통합개념 ' 출산육아수당 ' 지원 - 사업목적 유사성에 따라 국가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연계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구분		소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출 산 육 아 수 당	국비 연계 사업	첫만남이용권	200	200					
			보육료	964		527*	437			
			누리과정	1,008				336	336	336
			아동수당	720	120	120	120	120	120	120
			부모급여	1,800	1,200	600				
	자 체 사 업	출산육아수당	1,100	300	200	200	200	200		
	합 계		5,265 (최대)	1,820	920 (최대)	757	656	656	456	
	※ 만1세 : 부모급여-보육료 병급불가									
<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유사사업 연계 관련 관계부서 협의 : '22. 9.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 '22. 10.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수당 지급 세부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22. 12~ '23. 1.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지급 : '23. 3.~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과장 조병철 (☎220-2860) 팀장 김의웅 (☎220-2881) 담당자 이승혜(☎220-2883)										

질문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일자	2022. 9. 28.
	성 명	김현문	관리번호	403-05-01

질문제목 충청북도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관련

소관부서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질문요지 (제안사항) ○ 충청북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방안 마련 할 것 (신청 시군, 읍면·동부터 확대 실시)

□ 충청북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현황(2022년)

구 분	운영시기	예산액 (천원)	운영 방식	비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연중	1,250	사이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축제장	4,400	대면	시군 수요 조사후 진행
코로나19 관련 무료법률상담 (도변호사회와 협업)	연중	비예산	사이버	

추진상황

□ 추진실적

-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추진 계획 수립 : '22. 9.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대면·전화 상담 확대
 - 무료법률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 개선 방안 도출
-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관 추천 의뢰(충북지방변호사회) : '22. 12.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시 확대 운영 추진
-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관 위촉 및 사전 홍보 : '22. 12. ~
-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 상담 개시 : '23. 1월 말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과장 김준영 (☎220-2310) 팀장 오금년 (☎220-2311) 담당자 조은숙(☎220-2314)

VIII.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2. 7. 22.
	성 명	박진희	관리번호	402-10-01
발언제목	김영환 도지사 공약파기 사과하라			
소관부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공약 파기 철회와 함께 현실성 있는 공약이행 계획을 밝혀야 할 것 			
추진상황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경기침체, 도세 증가율 급감 등 재정여건 악화로 선거 당시와 여건 변화 고려 ○ 국가 정책방향,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국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내실있도록 사업설계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유사성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과 연계,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 추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부모급여 **(출산육아수당) 첫해 300만원 지방비 지원, 매년 200만원씩 4년간 800만원 추가 지원 ○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 감사효도비 연 1회 10만원 지원 ※ 단계적 확대 검토 ○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제외기준 완화***로 수혜자 확대 ***2,900만원 이상→3,700만원 이상, 귀농인·연금수급자 등 기준 삭제 - 現 50만원 → '23년부터 60만원 지급 ※ 단계적 확대 검토 </div> <div>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약별 사업 추진 : 공약사업 추진부서(청년정책담당관, 노인장애인과, 농업정책과) ○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관리 : 정책기획관 </div>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홍순덕 (☎220-2300) 팀장 이종민 (☎220-2141) 담당자 정선미(☎220-2144)

발언의원	소 속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발언일자	2022. 12. 16.
	성 명	이동우	관리번호	405-08-01
발언제목	충청북도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 도를 넘었다			
소관부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발언요지 (제안사항)	○ 집행부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 형태			
추진상황	<p><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 시 법정 절차 무시 및 도의원 배제 등 기강 해이 ○ 도의원 및 의회 경시(무례한 언사 등) <p><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실·국·원·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에 공문 발송 : '22. 12. 21. - 제목 : 도의회 관련 대응 철저 요청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준수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조례 등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준수 ▶ 도의회 및 도의원 존중(답변·대응시 언행 주의 및 자료제출 적극 대응) ▶ 본회의, 상임위 등 출석요구 공무원 불출석 자제 (회기일정 참고하여 사전 일정 조정) *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 시, 사전 보고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실·국·원·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에 도의회 관련 업무 협조 요청시 상기 준수사항 지속 당부 요청(수시)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정책기획관 홍순덕 (☎220-2300) 팀장 김기래 (☎220-2151) 담당자 장두창 (☎220-2152)

**IX. 건의 · 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